

##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

의안 번호	647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9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### 1. 제안이유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(안 제3조)
- 나.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(안 제4조~제5조)
- 다. 대구형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(안 제6조)
- 라.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강조기간 운영(안 제7조~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2 및 제4조의3(※ 불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2. 8. 22. ~ 9. 13.(22일간)
  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7건 제출, 결과요약서 불임
  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 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  - 4) 갑질영향심사 : 개선의견 없음
  - 5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  - 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 사유서 불임

##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대구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협력체계 구축 등)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, 대구고용노동청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, 사업주단체, 연구기관, 자치구·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4조(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) ① 시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대책(이하 “예방대책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
2.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·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
3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·업종별 대책
4. 사업주 및 근로자,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
5.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
6.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·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
7.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)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(다만, 사업장 지도 대상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)
2.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
3.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 운영
4.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
5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
6.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
7.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
8.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대구형 안전보건지킴이)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형 안전보건지킴이(이하 “안전보건지킴이”라 한다)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“안전보건지킴이”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·조사·개선·지도·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.

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,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
2. 기업체,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·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
3.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

④ 안전보건지킴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
2.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
3.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
4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⑤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)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

2.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)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

2.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표

3.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산업안전보건법

**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#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 : 해당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## 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등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경제국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 상 민

## 입법예고 결과

의견 제출자	내 용	조치결과
전국금속 노동조합 대구지부	○ 제1조(목적) 재규정 - ‘시민의 생명, 안전,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’라고 재규정할 것	○ 미반영 - 위임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한 것(법제처 권고사항)
	○ 정의/적용범위/지원대상/사업주의 협조/사업장 지도에 관한 규정 신설	○ 미반영 - 위임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정의(산업안전보건법 제2조(정의)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조례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음 - 상위법령(산업안전보건법 제3조(적용범위), 제5조(사업주 등의 의무)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(법제처 권고사항)
	○ 제4조(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) 내용 추가 - 종합계획, 기본계획, 실행계획을 추가할 것 - 정책 수립 주기를 적시할 것	○ 미반영 - 예방대책에는 종합계획의 수립, 이에 따른 기본계획, 실행계획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임 - 상위법령에 정책 수립 주기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고,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 등 자료분석을 통해 적절한 시기마다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

의견 제출자	내 용	조치 결과
전국금속 노동조합 대구지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5조(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) 구체화 및 내용 추가</li> <li>- 사업장 지도 대상을 시장이 정할 수 있다는 문구의 의미가 모호함</li> <li>- 유해화학물질 정보 및 관련 규정 등의 공개를 지원 항목에 추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 반영</li> <li>- 사업장 지도대상을 시장이 정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은 사업장 지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한 것</li> <li>-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6항 및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 취급정보가 공개되고 있음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6조(대구형 안전보건지킴이)</li> <li>- 노동 관련 시민단체, 노동 안전보건 연구기관 등에서 노동안전보건 관련 활동을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추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 반영</li> <li>- ‘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·기관 등’에는 해석상 노동 안전보건 관련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등도 포함되며, 이러한 단체·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전문적·기술적 성격을 고려한 것임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9조(중대재해안전협의회)</li> <li>-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 반영</li> <li>- 중대재해안전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며, 중대재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내부 자문협의회로,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문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임</li> </ul>



의견 제출자	내 용	조치 결과
전국금속 노동조합 대구지부	○ 대구광역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조항 추가	○ 미 반영 -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「산업 안전보건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위촉 하여 운영하는 제도로,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안과는 관련이 없음